‘전대 룰’ 갈등 결국 폭력사태로

민주 13일 분과위 회의 폭언·물병 오가
조기 과열… 계파간 정면 충돌 불가피

10월3일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의 향배를 좌우할 ‘전대 룰’을 둘러싼 계파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전대 룰을 논의하는 전대준비위 회의에서 몸싸움 직전 사태까지 가는 등 조기 과열에 따른 이전투구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주류측 486 인사인 강기정 의원은 17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지난 13일 전대준비위 당헌.당규 분과위 회의에서 폭력 사태가 있었다”며 “비주류측 김모 전 의원이 윤호중 수석사무부총장 등 2명에게 폭언과 함께 물병과 의자까지 집어던지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제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강 의원이 언급한 ‘불미스러운 사건’은 지도체제와 당권-대권 분리 문제 등 ‘전대룰’에 대한 당내 여론조사 실시에 앞서 구체적 문항 조율을 놓고 주류와 비주류측이 신경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류측 윤 사무부총장 등이 몸을 피하면서 물리적 충돌은 피했다는 후문이다.

강 의원의 발언이 있은 후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민 눈에 안 좋게 비쳐질 수 있으니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단속에 나섰다고 한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이 지목한 김 전 의원은 “주류측 인사들이 현 단일성 지도체제를 고수하기 위해 문항을 편파적으로 배치하려고 해 격론을 벌이다 일어난 일”이라며 “이런 상황이 발생해 미안한 마음이지만 앞으로도 특정 계파의 ‘사당화’ 시도에 대해선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대 유권자인 대의원 선출 권한을 갖는 지역위원장 선임 문제를 다루는 조직강화특위 구성 문제를 놓고 계파간 힘겨루기를 벌이다 전날에서야 기존에 배치된 주류측 사무부총장 2명을 정동영계 주승용, 손학규계 우제창 의원으로 교체하는 선에서 인선을 매듭지었다.

전대 준비위는 오는 20일까지 현역 국회의원 및 원외 지역위원장,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1천300여명을 대상으로 전대룰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어서 계파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北 가는 말라리아 방역물자

5.24조치 이후 첫 인도적 지원이다. 17일 오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측이 준비한 말라리아 방역물자가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을 통과, 북한을 향하고 있다. 이날 의약품 지원은 천안함 침몰로 방북을 금지한

/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김효석 ‘뉴민주당…’ 출판기념회 성료

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김효석 의원(담양·곡성·구례)이 쓴 ‘뉴 민주당, 그 거대한 기쁨’ 출판기념회가 17일 오후 3시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각 정당의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각계 인사와 당원 등 2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송영길 인천시장, 강운태 광주시장, 안희정·이시종·김두관·박준영 지사 등 광역단체장들은 영상 축하메시지를 전달했다.

강기정 ‘영산강 특별법안’ 제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광주 북갑) 의원은 영산강 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영산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고,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해 국비가 70% 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영산강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했다.

서갑원 순천 대대지구 배수 국비 지원

민주당 서갑원 의원(순천)은 순천 대대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세부 설계 및 신규 착수 지구로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181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순천 대대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수혜면적이 총 299ha으로, 하천에 인접된 저지대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에 따른 농사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김성곤 택시 LPG 면세 연장안 제출

민주당 김성곤 의원(여수 갑)은 택시용 LPG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일몰기한을 2011년 4월 30일에서 2015년 4월 30일까지로 4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침체와 대체 운송수단의 성장으로 택시업계가 겪고 있는 불황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고, 택시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광주시의회 “北 영·유아 지원해야”

광주시의원들은 17일 성명을 내고 “남북 간의 끊임없는 반목과 대결 구도 지속 속에 천안함 사태 후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사업마저 중단돼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영·유아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원들은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에 봉착해 있으며 특히, 취약 계층인 영·유아 상당수가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민간차원에서 북한 돕기 운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북구의회 매니페스토 실천운동

광주 북구의회가 6·2 지방선거 당시 주민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매니페스토 실천운동 연구회’(대표의원 김상훈)를 만들었다. 이 모임에는 북구의회 소속 의원 14명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성인 60% “MB정부 대북정책 불만족”

서울대 통일의식 설문조사

남북통일이 필요하다는 성인들의 인식과 기대감이 상승했지만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한국갤럽과 함께 지난달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통일의식을 설문조사해 17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39.5%였으며 ‘불만족 한다’고 답한 이는 60.5%였다. 또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여기는 응답자는 28%에 불과했고 ‘잘 반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72%에 달했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현실주의적 접근 태도를 보이는 성향도 뚜렷해졌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9%로 2008년(51.8%) 및 지난해(55.9%)보다 상승했으며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된다’는 응답도 2008년(47.5%)과 작년(53.2%)에 비해 많아졌다.

통일이 돼야 하는 이유로 ‘같은 민족이어서’라고 응답한 이는 43%로 2008년(57.9%)과 2009년(44%)에 이어 3년째 감소했지만 ‘전쟁위협 해소’(24.1%)와 ‘선진국이 되기 위해’(20.7%) 등 현실적인 이유를 꼽은 이는 3년째 증가세를 보였다.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비관적으로 답한 응답자(20.6%)도 2008년(13.5%)과 작년(19.9%)보다 늘었으며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이도 67.3%로 최근 3년 사이 최고치를 나타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통일에 도움된다’고 답한 응답(68.6%)과 ‘정기적인 남북 대화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응답(75.3%)도 최근 3년 연속 상승했다.

통일을 위해 시급히 해결할 문제로는 ‘군사적 긴장해소’(83.6%)와 ‘북한의 인권개선’(82.8%), ‘북한의 개방과 개혁’(78.2%),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75.7%) 등을 많이 꼽았다. /연합뉴스

남북교류, DJ ‘햇볕정책’때 활짝… MB정부땐 위축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를 뒷받침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 지난 1일로 시행된지 꼬박 20년을 맞았다.

노태우 정부가 1988년 발표한 ‘7·7선언’으로 본격 추진된 남북교류는 1990년 8월1일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되면서 활성화의 토대가 마련됐다. 그동안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에 따른 한반도 긴장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교류의 끈을 놓지 않은 것은 남북교류협력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특히 남북교역은 1994년 11월 발표된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남북경협활성화 조치 등 제도적 기반이 꾸준히 확대되다가 1998년부터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활짝 꽃을 피웠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도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하면서 남북교류는 꾸준히 늘었고 2005년부터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되면서 교역규모는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천안함 사건 등으로 남북교류가 줄어들면서 남북교류협력법도 의미가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가 비핵화와 남북관계를 연계하는 ‘비핵개방 3000’을 대북정책으로 내세우고 북한이 대남 도발행보를 이어가면서 남북간 대결구도가 심화됐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강화됨으로써 남한의 대북교역 기반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한파를 맞은 남북간 교류협력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평화통일에 대비한 통일세를 제안하면서 새삼 주목받고 있다. 한반도 통일비용을 줄이려면 대북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 등 교류협력을 활성화 조치를 통해 점진적인 통일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